

“자본시장, 고령화·저성장 위기 타개할 핵심역할 할 것”

이현승, 금투협회장 ‘출사표’

비공식 출마자 등 4~5파전 예상
이현승 전 대표 “회원사 ‘즉시소통’
든든한 동반자·진정한 대변자 될 것”

이현승 전 SK증권·KB자산운용 대표가 23일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공식 뛰어들면서 금투협회장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다. 공식 출마 의견을 밝힌 것은 이 전 대표가 처음이다.

금융투자업계는 4~5명이 자본시장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비공식 출마 의사를 밝힌터라 최소 4~5파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이현승 전 대표는 이번 출마의 변을 통해 “한마디로 금융투자협회의 존재 이유는 회원사의 성장과 가치증대에 있다”며 “‘맞춤형 소통’을 통해 회원사의 니즈와 고충을 파악하고 ‘즉시 소통’을 통해 신속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이현승
전 SK증권·KB자산운용 대표

회원사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증권사들의 숙원사업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종합투자계좌(IMA)의 조속한 도입 지원과 중소형 증권사들의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 개선, 중소형 증권사, 운용사, 신탁사, 선물사들의 비용 절감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화와 저성장 위기를 경고했던 이 전 대표는 해법이 바로 자본시장 활성

화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번 금투협회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라고 설명한다.

이 전 대표가 구상 중인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경직된 규제 환경 개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특히, 금융사의 신규사업 진출 시 사업과 무관한 제재 이력으로 인해 신사업 진출이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연계 제재를 폐지할 방침이다.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 경쟁력 있는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부처 간의 일관성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는다. 기획재정부의 국고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했던 증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프라이머리 딜러를 둘러싼 담합 조사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처지에 놓인 것은 대표적 사례다. 디폴트유

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5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정된 노후 보장으로 이어지게 할 예정이다.

그는 분리과세 대상을 주식에서 펀드까지 확대하고, 분리과세 세율을 배당 메리트를 제할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시장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소액주주들에게 적용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IT인프라나 소비자 보호 기반이 잘 마련된 금융투자 업계가 디지털 자산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큰형증권(STO),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스테이블 코인 등 혁신 금융상품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자본시장에서 얻는 수익이 ‘제2의 월급통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고,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혁신기업의 자본조달을 촉진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고령화와 저성장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자본시장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들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행정고시(32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에 공직생활 시작했다. 메릴린치증권을 거쳐 SK증권, 코람코운용, KB자산운용 등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를 16년간 역임한 자본시장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민과 관, 증권사와 운용사, 대형사와 중소형사, 외국계와 국내기업을 모두 거친 보기 드문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양한 업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정책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이다.

한편 서유석 현 금투협회장, 황성업 신영증권 대표,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 등이 17대 금투협회장 후보로 마하평에 오르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2030년 수출 4500억弗 목표 ‘소부장 강화’

구윤철 부총리, 소부장 기본계획
혁신·시장·생태계 역량 강화 골자
무역수지 흑자 목표액 1500억弗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 탄소중립 등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혁신·시장·생태계 역량 강화가 골자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소부장 수출액을 지난해 3637억 달러에서 2030년 4500억 달러로 확대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1125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 늘리며, 생산액 1350조 원 달성이 목표다.

기본계획은 ▲도전기술 개발 및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내수 신시장 창출 ▲수요·공급 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3대 협력 방안 추진 등 세 가지 전략으로 추진된다.

기술 분야에서는 모방형에서 선도형 체질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시장 선점형 첨단제품, 범용제품 고부가, 탄소중립 대응,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 4대 도전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정부는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옴 기업’을 100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2030년까지 15대 슈퍼 을 프로젝트를 추진해 장기 R&D와 사업화 투자를 지원한다. AI와 R&D 결합을 통한 혁신 속도 가속화도 목표로, 소재 데이터 1500만 건 확보, 공공 AI 플랫폼 개방, 초고온·극저온·초고압 등 극한환경 적용 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장 역량 강화도 핵심 과제다. 한미·조선 협력, 인도 반도체 프로젝트(ISM) 등 주요 수출국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하며, AI·양자·방산·재생에너지·항공·드론 등

핵심 분야는 공공부문 선제 투자로 내수 신시장을 창출한다.

수요·공급기업 협력 강화 전략도 마련됐다. 기존 1차 협력 중심 구조를 다수 기업 참여 N차형 모델로 확대하고, 반도체 유통기관 등 차세대 전략 품목은 대형 협력 모델을 구축해 기술 성숙도에 맞춘 R&D·실증·투자 지원을 제공한다.

투자 확대를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 융자·지분 투자 연계, 첨단산업기금·공공출자펀드 등 마중물 투자도 확대한다.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는 적극 지원, 부족한 품목은 대체 수입처 발굴과 핵심광물 비축·재자원화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소부장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2030년 수출 4500억 달러, 무역수지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수정·보완 가닥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폐지, 부담스러워… 신중 검토중”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가 당장 폐지보다는 수정·보완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주간 동향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간 동향 조사는 하되 공

표하지 않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을 놓고 내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통계 정확성 논란이 일자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한국부동산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통계에 투기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통계에 실거래가와 호가가 혼재돼 적용되는 점이 주된 문제로 제기돼 왔다.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가가

충분한 지역은 이를 기반으로 통계를 작성하지만, 거래가 적은 지역은 인근 시세나 중개업소 의견 등을 추가 반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심리가 국가 통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조사 폐지와 수정·보완을 둘러싸고 다양한 여야 의견이 오갔다. 먼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과의 질의 과정에서 “지금의 주간 통계는 투명성도, 정확성도 없다”며 “세상 어느 나라에도 투기꾼을 위한 통계는 없다. 불투명한 통계를 계속 발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플랜 채택… 정책공조 중요성 재확인”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 회견
구윤철 부총리 “번영 공동성명 채택
역내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마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성과와 관련해, 의장국으로서 주도적 아젠다를 제시하고, AI 시대 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새 협력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회의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인천에서 열렸다.

구 부총리는 23일 오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열린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첫째 날 열린 재무장관회의에 대해서는 “세계와 역내 경제전망, 혁신, 디지털 금융, 재정정책 등을 주제로 열린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고, 이를 토대로 공동성명과 ‘인천플랜’을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인천플랜은 향후 5년간 APEC 재무장관회의의 논의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이라고 했다. 또 “혁신, 금융, 재정정책, 접근성과 기회 네 개 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이 제안한 AI 대전환과 혁신 생태계 조성, 그리고 모두에게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재무트랙 최초로 주요 의

제로 포함시켜 논의의 외연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국 통상정책, AI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천플랜 채택을 통해 역내 정책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내년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은 인천플랜이 제시한 우선순위 내에서 의제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틀~사흘차에 열린 구조개혁장관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AI 등의 디지털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구조개혁의 역할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내 시장·기업환경 개선, AI 및 디지털 전환 촉진, 경제적 참여 확대를 통한 번영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과 두 개의 부속서를 채택해 역내 구조개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1개 APEC 회원이 만장일치로 이루어 낸 합의여서 그 의미가 더 크다”며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성과와 논의의 흐름이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